(서울=뉴스1)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촉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29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다.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처리하기로 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은 오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여야는 2022년 11월 국회 산중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해당 법안들을 11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최근 원내대표들간 협상을 통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 등 일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데다 여야가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최종 의결까지는 산중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와 양당 간사의 의지에 따라 21대 국회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부터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4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더라도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논의, 본회의 표결의 수순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또 놓칠 수 있다. 방폐장을 짓는 데만 3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법안 처리는 늦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들은 모두 해당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 한울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이 경우 원전의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근본 해결책인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짓지 않으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 그동안 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원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9차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정부는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2022년 7월 고준위방폐물 R&D(연구개발) 로드맵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